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정책기조와 초기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박광무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라는 유례없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적극 증진하고 문화를 통한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여나간다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출발하고 있다. 또한 진보적 정권으로부터 보수적인 평가를 받는 정권으로 회귀하면서 문화권력의 이동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논란을 경험하게 된다. 선진일류국가의 구현을 국정 지표로 내건 가운데 문화정책 측면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국가를 표방하면서 문화 향유의 증진과 문화의 산업적인 기여를 위한 문화컨텐츠 정책의 강조, 그리고 국가 차원의 문화 기반을 구축하여나가는 일이 중요한 관심사로 제기되었다. 한편 국가재정에서 문화재정의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 정부 시기와 비교하여 더 강조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효율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가운데 문화예술 지원방식의 개선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고 비합리적인 요소의 개선과 저작권의 확립으로 컨텐츠와 창작물의 확실한 권리보장을 하는 것은 문화의 산업화, 제값받기, 선진화의 중요한 척도로 평가된다.

■ 주제어: 문화정책기조, 문화향유, 문화재정, 문화컨텐츠

I. 서론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일류선진국가의 구현을 내세우고 출범하였다.¹⁾ 유권자들은 건국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승화시켜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발전과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 세계화, 지식정보화, 온난화 등 지구적 과제가 중

1)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는 선진일류국가 구현의 비전(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하에 신 발전체제로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의 다섯 가지 국정지표를 가지고 21대 전략, 193개 국정과제를 가지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b: 4, 17-22).

시되고 다원화된 국제관계에서 인간 중심의 보편적 가치가 확산되는 가운데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민생경제의 회복, 그리고 지역과 이념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화합과 미래를 향한 국가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출발하였다. 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행동규범을 창조적 실용주의로 삼고 국가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발전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의 기초와 초기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지난 참여정부가 종료되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이루어짐에 따라 참여정부와 비교하여 정책기조와 내용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문화정책의 환경과 내재적 여건이 어떻게 달라져 왔으며 이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기조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는지를 알아본다. 이어서 집권초기단계의 중요 문화정책 환경과 성과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내용을 알아보며 중장기적인 문화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방법은 역사적 제도주의와 정책변동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한다(박광무, 2009: 81). 정책의 외부환경과 내재적 여건이 정치적 사건과 환경의 급변에 따라 달라지고 문화정책의 주체가 달라지며 새로운 문화정책의 기초가 형성되는 것과 이에 따라 문화정책의 핵심내용이 어떻게 변동 형성되는지를 분석한다²⁾

II. 문화정책의 내재적여건과 문화정책기조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별개의 구호로 표시되지 않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박광무, 2009: 238)³⁾. 첫째, 문화지원의 원칙 변경이다. 국제교류분야의 전략적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실연심사나 평가를 통한 사후지원, 창작 집필실과 연습실 제공 등 간접지원, 생활 속의 문화예술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지원 4대원칙을 세웠다. 둘째, 문화부의 새 정책기조가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서 요란한 문화 활동보다는 국민 모

2) 본 논문의 내용은 본인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에서 제4장 제6절 이명박 정부의 분석내용의 일부분을 인용하면서 집권 초기의 성과 등을 추가로 보완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역사적 제도주의와 정책변동이론에 의한 문화정책 변동의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참조(박광무, 2009).

3) 문화체육관광부, 2008.12: 문화비전 2012; 유인촌 장관 인터뷰. 신동아 2008 11월호; 213-217

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셋째, 다른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술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수한 가치를 확대하고 작품의 질을 높여 세계에서 인정받도록 한 것이다. 넷째, 문화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 창조와 맥락이 닿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화전통과 민족정신을 새로운 가치로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한글 문화관 건립 등을 통해 한글의 실용성을 더욱 가다듬어 한글이 문화산업 곳곳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5대 문화콘텐츠 강국을 향한 도약과 신 성장동력으로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 제2의 온라인 게임혁명, 100년 감동의 킬러 콘텐츠 개발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⁴⁾

1. 정부의 변동과 문화정책 환경

1) 정치적 환경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요구를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장기적인 국가비전에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내세웠다. 이는 경제의 선진화, 삶의 질의 선진화,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의 지향을 의미했다. 그리고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규범으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선택했다. 즉 현실적인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중요시하고 새로운 목표와 방법을 창안하되, 체계적인 문제인식과 해결방법을 강구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전체적으로 개인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시장중심주의,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참여와 통합, 분배와 균형발전에 국정운영의 기초를 둔 노무현 정부와 차이를 두었다.

532만표라는 역대 최고의 표차와 지지율로 당선된⁵⁾ 이명박 정부는 경제

4) 킬러콘텐츠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혁신적 창의적 내용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콘텐츠를 뜻한다. 헤리포터 시리즈(출판), 반지의 제왕(영화), 대장금(방송 드라마), 미키 마우스(캐릭터), 태양의 서커스(공연) 등이 그런 예다. 독창적인 소재, 완성도 높은 제작, 글로벌 마케팅, 다양한 상품화 전략 등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헤리포터는 출판 영화 등으로 이 때까지 308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반도체 총 수출액 231조원보다 많은 수치이다.

5)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 2373만 2854표 가운데 1149만 2389표(48.7%)를 얻어 617만 4681표(26.1%)를 얻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물리치고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91668>).

불황과 불안한 국제정세 극복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내놓았지만 정치·사회적 여건이 순탄치는 않았다.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정당과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여성의 피격사건 등으로 대북관계는 악화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한미FTA 및 2009년 예산안의 여권 단독상정 등 국회의 파행은 지속되었고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4대강 살리기’ 관련 대운하 논쟁, 정권 교체이후 새 정부 출범과정에서 야기된 사회적 논란과 집권 1차년도 조직개편과 인사와 관련한 많은 견해들을 파생시켰다.

2) 법규와 사회규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출산률의 급격한 저하 등은 사회전반의 규범과 전통적 가족개념의 변동을 가져왔다. 특히 농어촌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가운데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 이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출산율은 인구의 자연적 대체수준인 2.1명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1.2명 수준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상황에 이르렀다. 저출산과 고령화추세는 1인 세대수의 증가, 저자녀 가정의 증가로 당분간 주택의 수요를 좀더 증대시킬 수 있음을 전망케 한다. 일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 현상은 삶의 방식과 문화적인 수요충족에 있어서도 고려하여야 할 변수가 되고 있다.

3) 경제 및 기술발전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집권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내외 경제여건은 위기적 상황으로 출발하였다.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경제위기의 원인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기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04-2007년의 4-5% 수준의 성장률에 비교할 때 2008년의 2.2%성장과 2009년의 -2.4% 전망은 경제정책 뿐 아니라 문화정책 전반에도 위축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났다. 그러나 2010년도의 경우 3.5%의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일인당 국민소득도 2007년 21,695달러에서 2008년은 19,231달러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문화일보2009.4.10).

2009년 4월2일 한·EU간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공식선언하였다⁶⁾. 유럽 27개 회원국과 한국간의 공산품 관세는 5년 이내에 대부분 없어지게 된다. “한·EU간 FTA 타결은 강력한 반보호무역주의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논평했다. 한국의 기술발전과 정보화는 세계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 인터넷과 이동전화 가입자 수를 비교하면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가 90.20명으로 스웨덴 및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며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수도 스웨덴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정보화 기술력과 시장형성이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⁷⁾

4) 국제환경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3대 비전은 “평화”, “번영”, “국격(國格)”이고 이에 따른 7대 원칙으로 ①북핵폐기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정책 ②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실천 ③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 ④아시아외교확대 ⑤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 ⑥에너지 외교의 극대화 ⑦문화 코리아 지향 등을 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 등 실용주의에 입각한 상호주의를 표방했다. 즉 새로운 평화구조의 창출과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합의사항이 반드시 이행·실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대북관계도 대외관계의 일부로 간주함으로써 이념에서 벗어나 실익을 추구하는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 대북외교정책의 구체적 발의를 『비핵·개방·3000구상』⁸⁾에서 볼 수 있다.

6) 한·EU간 FTA 공식 타결 선언에 이어 가 서명파 EU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발표된다.

7) 한국정보사회진흥원 <http://www.nia.or.kr/>. 지식경제부 IT 통계포털 <http://www.itstat.go.kr/>

8) 2008년 2월 ‘한국 외교안보의 창조적 재건을 위한 7대 과제와 원칙’이라는 일명 MB독트린 발표를 시작으로 6월엔 ‘비핵 개방 3000 구상’, 9월 ‘신한반도 구상’을 내놓았다. 북한이 핵을 포기

한편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 무역규모가 축소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섰고 이러한 위기 속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협력구도의 변화에서 한국이 새로운 국제적 위상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상호 실익추구 원칙에 따라 협력관계를 도모하여왔다. 그 시도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증진하면서 아세안과의 외교의 방향을 경제 무역, 문화 관광, 녹색성장 등의 3가지로 정하였다. 문화가 단순히 외교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중요한 독자적 항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한 아세안 정상회담시 아세안 외교의 방향 기초연설, 이명박 대통령, 2009.5.31). 특히 2010년에 있을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됨으로써 앞으로 세계 선진국 그룹의 명실상부한 지도자 국가로 역할하게 된 점은 이명박 정부 2년차의 중요한 외교적 성과라 하겠다. 이에 대비하여 문화정책적으로는 고품격 한국의 전통문화를 브랜드화하여 각국의 정상들에게 보여준은 물론 고부가가치 상품화, 고급문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이의 경제적 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5) 청와대

적어도 2008년까지의 문화정책에 관한 청와대의 관심은 일상적인 부처별 보고 수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정책의 경우 지하병커 경제비상대책반 구성운영이라든가 4대강 개발과 녹색성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범정부적인 추진구도와 대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못지않게 문화적인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문화예술인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여 기무사 부지의 미술관 전환 방침을 발표하며(2009.1.15), 국립대한민국관 건립 발표(2009.2.1), 닌텐도 게임기관 관련 게임산업의 육성을 강조하는(2009.2.5) 등 구체적 개별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본다. 또한 2009년 5월 말에는 한 아세안 정상회담 기초연설에서 문화관광을 아세안 외교의 3대 기초

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는 대결단을 한다면 10년 내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의 하나로 천명하였는데 이는 매우 의미있는 대통령의 새로운 문화외교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2009년 10월 문화의 달을 계기로 한 라디오 연설에서 대통령은 21세기는 문화가 경제이며 경제가 문화인 시대로서 문화가 산업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민족이 지닌 문화적 기질과 욕구를 문화로 품격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2009. 10.19). 앞으로 문화정책의 철학과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의 내용과 구성에 대하여는 지식기반시대에 이은 21세기 창조사회의 도래에 따른 구체적인 문화정책과 전략이 기대되는 것이다.

6) 언론과 시민단체 및 문화정책의 타기관 확산효과

이명박 정부에서의 언론과 국민 여론과 문화시민단체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언론의 속성상 관심 대상의 보도를 통한 확대재생산도 있지만 문화적 과제에 대한 높은 언론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문화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수준이 높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문화시민단체의 경우에도 문화권력의 충돌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화논쟁은 언제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양하고 뜨겁게 전개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논쟁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과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과업환경으로서 타 부처의 문화정책적 사고의 확산 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정책을 들 수 있다. 과거에도 통폐합되는 동사무소를 문화의 집으로 변환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의 2008 정책 개발 내용 중 “동네마당”이 있다. 이것은 동네 주변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복지 체육활동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희망의 책 보내기 운동』을 민·관 합동의 범국민운동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하나의 정착된 문화시책이 일반 행정기관을 통하여 전국에 확산된 사례로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정책 사례가 되기도 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기치아래 추진된 사례로서 문화시책의 부처확산 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⁹⁾. 또한 국가브랜드 위원회의 활동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록문

화의 보존 강화,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광의 강화 등은 문화관광정책의 부처 확산효과를 가져온 긍정적인 사례가 되는 부분이다(국가브랜드위원회 대통령 보고, 2009.7.22).

2. 문화정책의 내재적 여건

1) 문화관련 법·제도의 변천

정부는 2012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산업강국의 실현을 목표로 콘텐츠산업 육성계획에 나섰다. 콘텐츠 영역 간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발전동력을 상호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업무 일원화에 따른 콘텐츠 진흥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게임법 및 저작권법 개정작업이 있었다. 지난 노무현 정부의 장르별 문화산업진흥 법률의 분법화와는 제도개선 방향에 차이를 두고 있다.

한미 FTA 이행 관련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육성의 토대를 구축하였다(2008.10월 국회제출, 2009.7.23개정).

아울러 우리문화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체계적 해외문화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밖에 2009년도 정부입법 계획으로 13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될 법률안명으로 「방송영상진흥에 관한 법률」, 「광고산업진흥법」, 「국제방송교류재단육성법」, 「전통공연예술진흥법」으로 4건이 있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콘텐츠’·‘콘텐츠산업’ 등에 관한 개념 및 범위 재설정과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정비 등을 위한 전면 개정으로 콘텐츠산업 기본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법률의 제·개정은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문화분야의 경쟁력을 적시에 확보하고 효과적인 산업적 지원체계를 갖추는데 필수적이다.¹⁰⁾

9) 행정안전부(웹사이트) <http://mopas.korea.kr/gonews/main.do> (2008.11.19)

10)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역량과 협상력을 가늠하는 변수가 발의된 제반 법률의 처리 수준일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앞으로 정치권 일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2) 문화행정조직 및 인적자원

2008년 문화관광부에서는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인수하였고 이와 함께 부 명칭을 종전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개정하였다. 조직체계의 간소화와 운영의 효율화,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유사기능 및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곳을 흡수·통합하여 하부 조직을 대과체제로 전환하고 감원한 본부 정원은 신설부서에 통합 배치하였다.

2007년도 문화산업진흥단과 문화미디어진흥단은 2008년에 ‘문화콘텐츠산업실’로 통합되었다. 작지만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을 위해 2009년 들어 다시 10개 과·팀이 축소되는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2009.5.4). 모든 실·국은 대국·대과제(大局·大課制)로 전환되었다. 전통적인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은 문화예술국으로 통합되었으며, 한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설된 과도 있다. 관광산업국에는 4대강 유역의 문화·관광인프라 확충과 고품격 지역문화창조를 위한 녹색관광과, 새만금개발팀이 신설되었고 2013년 완공예정인 ‘국립대한민국관’의 건립추진단을 3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였다. 대국 대과제 도입으로 효율성을 강조하고 보다 집약적인 조직체계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직 개편이 행정학에서의 적정통솔범위에 적합한 것인가, 혹은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운영과정을 보며 별개로 검증되어야 할 과제이다. 중간 관리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과별 무보직 서기관의 팀장제 직명을 주는 등 관리역량을 보완하여 과장 직속이되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서기관의 사기 진작과 과도한 과장의 직무를 경감하는 이중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안한다.

3) 문화 재정

문화재정은 2008년의 경우 2조 6,354억원에서 2009년에는 2조 8,404억원으로 7.8% 증가하였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예산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증액된 것은 문화정책추진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 하겠다.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무료관람 시행(관람객 26%증가), 지역기반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시설 확충,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 민족·전통문화 자원의 재발전 및 전략적 문화교류 확대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다루어졌다. 그 외에 국립대한민국관 및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조성이 신규과제로 선정되었다.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문화예산의 또 다른 중요한 한축을 이루고 있다. 콘텐츠업무 일원화에 따른 콘텐츠 진흥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민간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표(2008.9.22) 및 콘텐츠 분야별 육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축, 융합형 콘텐츠 개발 등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문화기술 투자 확대, 콘텐츠 제작금융지원 확대, 그리고 올바른 저작권 이용문화 조성 및 불법저작물 단속을 강화하였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과 재정의 투입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새로운 문화가치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2010년도 문화재정은 3조 423억원으로 편성, 정부총재정의 291조 7,805억원의 1.04%에 상당하는 규모가 되었다. 이것은 사상최초로 문화부 재정이 3조원을 넘은 경우이다. 그러나 비례적으로 보면 여전히 국가 재정의 1%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화시대의 재정 투입의 규모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3. 문화정책의 주체

1) 정책공급자 측면

이명박 정부의 새문화비전의 추진방향에는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이 포함되어 있다. 조직설계 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영되고 있는 예술, 콘텐츠, 관광 등 분야별 진흥기구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중앙진흥기구들의 역할을 재편함으로써 지역기구들과의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을 추구하고자 했다. 기능과 조직 중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 이양하여 ‘일 잘하는 문화행정’, ‘섬기는 문화행정’으로 실용과 효율이 자리잡은 문화행정 추진을 목표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a; 10-29). 국정홍보처

와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흡수하여 그간 추진했던 문화분야의 산업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중앙과 지방간의 중복과 낭비의 요소를 줄이고 각 기구별 운영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민들의 생활현장과 실용적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 문화 종사자 측면

창조자의 예술 창작 의욕을 고취하되 그들의 창작 정신과 창작행위자체를 왜곡하거나 지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정책을 배제하고 간접지원방식의 도입, 사후지원에 의한 검증된 창조자와 종사자에 대한 세계적인 예술인으로 양성, 선택과 집중에 의한 탁월한 예술가의 발굴이 그것이다. 예술창작행위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은 예술뉴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공공미술프로그램으로 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여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일이 포함된다. 문학관과 도서관 등에서 소설가 등 작가들이 일정기간 동안 집필활동을 돕게 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운영이 있다. 공연예술에 있어서도 소극장, 문예회관 등을 운영지원 함으로써 상주 공연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공연 창작물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예술가와 단체로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로 정착시킨다. 이와 같은 지원시책의 변화는 종전의 이른바 나눠먹기식 지원의 폐해를 극복하고 간접지원과 창작 기반을 보다 내실있게 갖추므로써 안정된 창작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3) 이용자 측면

수요자 중심의 문화 향유권 증대노력은 이명박 정부에서 보다 강화되었다. 국민문화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무료관람정책 시행으로 관람객이 26%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다른 면에서 공사립박물관의 관람객 숫자와 입장료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그와 같은 무료화 시책이 적절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게 하였다. 이에 2010년부터는 유료로 전환하되 무료 및 할인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무료 논란도 종식토록 하였다.

지역특화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도시의 조

성은 문화적 삶과 기반을 생활권으로서의 도시차원에서 완성하는 일이다. 문화적 선진화의 목표가 완성되는 공간이 곧 문화도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일관된 추진체계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로 이관되어 그 정체성에 관한 검토가 완성되지 않은 채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문화도시 조성의 제도화를 도모하는 일이 당면과제이다.

같은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이되, 노무현 정부가 소통과 나눔을 기반으로 사회 양극화를 지양하고 지역간 문화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사회 취약계층 문화지원, 지역거점 문화도시 개발사업 등을 추진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경제침체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를 통해 한국인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위기 극복의 공동체 의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공감 문화예술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2009년도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프로젝트로서의 문화체육 바우처 제도,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지원 등 생활 속의 문화창조활동이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방침은 수요자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제공하되, 예술, 콘텐츠 산업, 관광, 체육 등 공급 특성별로 특화된 정책영역 상호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대폭 확대하여 정책의 산발성과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문화정책은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에 목표를 두고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모든 영역에서 질적 완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켜갈 것임을 밝혔다. 경쟁을 통해 더 잘할 수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세계최고의 경쟁력 획득을 목표로 함을 밝혔다.

3) 문화 거버넌스의 작동

이명박 정부는 영역별 장르별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부와 민간, 자치단체의 ‘실용적 역할분담’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다. 민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겨주고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정부가 분명하게 책임지는 방향으로의 정책추진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 대표도서관의 지정 및 설립과 공동도서관 건립지원 등 문화 공간 확충 및 운영서비스 확대를 피하

고 있고 2012년까지 700여개 시민문화클럽활동 조성과 지원을 위해 기업메세나 등과 연계하여 기업 문화클럽 실태파악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8a; 4-34).

이와 같은 역할분담 외에도 통합적 시각이 반영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문화산업영역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핵심적인 소프트파워를 잠재하고 있는데 콘텐츠 영역 간 유기적 연계와 협력으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과 기업, 국가간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4.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기조

2008년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¹¹⁾

첫째, 문화지원의 원칙이 변경되었다. 즉 국제교류분야의 전략적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실연심사나 평가를 통한 사후지원, 집필실 등 간접지원, 아마추어 동호인 등을 지원하는 생활 속의 예술 확대 등 4대원칙을 세웠다. 둘째, 문화부의 새 정책기조가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서 요란한 구호적인 문화활동보다는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셋째, 문화나 예술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수한 가치를 확대하고 작품의 질을 높여 세계에서 인정받도록 한다. 넷째, 문화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 창조와 맥락이 닿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과 정신이 새로운 가치로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글 문화관 건립 등을 통해 한글의 실용성을 더욱 가다듬어 한글이 문화산업 곳곳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5대 콘텐츠 강국을 위한 도약, 신성장동력으로서 차세대 융합형의 콘텐츠 육성, 제2의 온라인 게임혁명, 100년 감동의 킬러콘텐츠 개발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¹²⁾

이러한 기조는 2008년 말, 이명박 정부의 문화비전(2008-2012)으로 정리되

11) 유인촌. 신동아 2008.11: 213-217; 문화체육관광부, 2008a: 2-5 참조

12) 영국은 10여 년 전부터 문화산업을 창조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여왔는데 2005년 매출 130조원(608억 파운드), 수출 31조원(146억 파운드)을 기록하고 있고 영국 GDP의 7.3%를 차지하였다.

었다(문화비전, 2008: 14). 이명박 정부의 문화비전은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표방한다. 이를 위해 4대목표를 설정하였는데, 그중 문화가 펼쳐지는 나라와 콘텐츠로 부유한 나라가 바로 문화정책이 달성해야할 목표에 해당한다.

그리고 6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그 첫째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이다. 문화소비는 수동형, 관찰형에서 이제 능동형, 체험형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문화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분야별로 특화된 정책 상호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대폭 확대하여 수요자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 제공한다.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 ‘문화행정의 사회통합에의 기여’라는 특수성을 활용하고자 함을 밝혔다.

둘째,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의 수립이다. 창작역량의 강화와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전반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유효하다.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지원영역을 최소화하고, 간접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정부의존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사후지원, 간접지원 원칙을 적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전략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등 분야별 진흥기구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중앙 진흥기구들의 역할을 지역기구들과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적 특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활현장과 실용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넷째, 상생하는 문화와 산업의 육성전략이다. 예술, 자연과학, 인문학의 토대 위에서 문화와 기술이 서로 융합하여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가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주도할 핵심적 소프트파워의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섯째, 소통과 개방의 전략이다. 문화 교류와 개방을 통해 세계와 함께하는 국가이미지를 확립하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문화를 통해 치유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고 소통될 수 있는 접근을 도모한다. 한류의 전파와 적극적인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해 친근하고 품격있는 글로벌 코리아 이미지를 제고하여 문화를 통한 선진화의 기틀을 창조해 나가는 실천전략이

기도 하다.

여섯째,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 전략이다. 이제 문화는 삶과 생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고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는 대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문화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간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지구촌 지식, 정보격차 해소와 문화간 대화를 통해 문화다양성의 증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Ⅲ. 집권초기의 주요 정책환경과 성과(2008~2009)

1. 집권초기 문화정책 환경

집권초기의 정치사회적 환경은 매우 급변하는 가운데 이것이 문화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문화조직의 변동도 가져왔다.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가 이어졌고 이는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으로 급속히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아노미 현상을 야기하였다. 이것은 통치권을 위협하면서 집권초기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는 문화예술계 전반의 위축을 가져왔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독도영유권 문제 등은 남북한 간의 냉각은 물론 한일관계의 외교를 경색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한일문화교류의 정체를 가져왔다.

2009년 상반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와 이어진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로 연이은 정치적 격변으로 문화예술계의 갈등과 민주화 논쟁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개성공단의 무력화 등으로 남북관계는 계속 경색되기도 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은 강 유역 문화재 발굴의 적절성 논란을 야기하면서도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여나갔다. 이와 같은 집권초기의 정치적 사건과 문화정책의 영향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정치적 사건과 환경의 급변 및 문화정책의 변동내역

(1) 정치적사건 환경급변	(2) 문화정책에 미친 영향	(3) 조직 변동
2008 국내 최초 우주인, 이소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송례문 화재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독도문제로 한일외교전 비화 언론 총파업	문화교류포함 대북관계 전반의 악화 문화제로 불리운 시위 문화예술계 참여 문화재 보존의 전반적 점검 문화예술 시장의 위축 문화바우처 및 문화나눔운동 확산 남북교류 관계 경색 한일 문화교류의 정체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홍보처 인수 해외문화홍보원, 정책방송원 인수
2009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논란 '네티즌, 미네르바 구속'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국민장 조문정국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개성공 단 무력화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정부의 PSI 참여 4대강정비사업 확정	공식 (문화)교류사업 사실상 중단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폐해간 논쟁 정치적 이념 및 민주화논쟁 촉발 문화예술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별개로 남북관계 경색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 추진	대국 대과제 시행 (10개 과 팀 통폐합) 문화정책국+예술국 →문화예술국 미디어정책국 분리신설 중무실 보강(종교문화)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신설(한시조직) 디지털도서관 신설 국립어린이박물관 신설

2. 문화정책의 주요 성과

이명박 정부 1년차 주요 문화정책의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먼저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예술 창작역량을 강화함에 있어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무료관람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관람객이 26% 증가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는 사립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무료관람에 대하여 반드시 찬성하는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은 지역기반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시설 확충을 추진하였다. 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였다. 문화예술 지원방식의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였다. 종전의 직접 사전지원과 문화예술인 중심의 지원으로부터 중대한 변경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로, 민족·전통문화 자원의 재발견 및 전략적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보급하며 전통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세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글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의 확산을 위한 한글주

간을 선포하였다. 또한 중장기적 문화교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국가별 특화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립대한민국관 및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새롭게 조성기로 확정하였다.

셋째로,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어 콘텐츠업무 일원화에 따른 콘텐츠 진흥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민간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신 성장동력 발표(2008. 9.22) 및 콘텐츠 분야별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 게임산업 진흥, 만화·애니·캐릭터 및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하였다. 해외시장 진출 원스톱 지원을 위한 ‘글로벌콘텐츠센터’를 설립·운영에 들어갔다(2008.11.28). 융합 환경의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기술투자를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자금 원스톱 지원 및 완성보증 도입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 및 서울보증 등이 참여하였다(‘08.5월~) 올바른 저작권 이용문화 조성 및 불법저작물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다(저작권 학교 운영 4개시도, 23개교). 또 불법 저작물 단속을 강화하여 ‘서울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1) 중요문화정책의 성과와 내용

(1) 문화예술 진흥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문화비전 2012』를 참고할 때 크게 ‘예술의 창조성과 다양성 제고’, ‘우리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세계화’로 분류된다. 세부 핵심정책과제로 문화인재 양성, 예술창작공간 확충, 문화예술 인공제회 설립 등 안정된 예술지원제도 구축, 국립예술기관 국가 브랜드화, 대중문화예술의 인프라 개선과 관련 종사자의 복지대책 마련 등 체계적 진흥사업,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설치와 운영활성화를 통한 문화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 중소기업의 문화접근성과 수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 문화경영지원센터 설립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전 정부 관련사업과 비교해 볼 때 대중문화예술지원사업과 예술의 자생력 도모와 글로벌 코리아 형성을 위한 국립예술기관 브랜드화 사업, 경제불황 타개책으로서의 문화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중점 추진되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수예술의 지원정책이다. 이명

박정부는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 속의 예술확대 등 4대 방향으로 순수예술지원방식 개선 및 지역협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를 위해 2008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개선방안을 정립하였고, 2009년 체계정비를 완료하였다.

문화예술 통계의 정확성, 비교 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예술통계 생산, 관리체제의 정비를 위한 로드맵을 2008년 수립하였다. 문화예술통계 생산설계 및 정책성과지수를 개발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9년 현재 개발단계에 있다.

(2) 문화기반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설치·운영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야간개장확대운영 및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디지털 도서관을 개관하고 이를 통하여 도서관의 장서와 자료의 활용도와 이용대상 및 영역을 국내외 모든 계층에 확산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농어촌, 폐교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할 예정이다(2009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산업시대 유산을 활용한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과 박물관 복합단지의 조성 추진,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먼저 근대 산업유산의 창조적 활용사업은 구 서울역사, 당인리 화력발전소, 기무사터의 미술관화, 덕수궁 동관의 미술관조성 등이다.

(3) 문화산업

문화, 관광, 스포츠분야의 콘텐츠 산업은 고용없는 성장시대의 대안이자 그 자체가 녹색성장산업이다¹³⁾. 고부가가치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식기반사회이

13) 문화산업을 2007년에 문화콘텐츠 중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부르기 시작하였고 종전의 문화산업국도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실로 개편하였다. 또한 콘텐츠의 영역을 문화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관광, 스포츠가 연계된 것으로 인식하고 정책에서도 연관효과를 기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문화분야의 재원을 관광진흥기금에서 분담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또 문화와 관광과 체육의 현장은 상호 연관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날로 증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후 창조사회의 주력산업으로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특히 방송 통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콘텐츠산업의 성장단계와 가치사슬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2009년도 국내 문화산업은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신(新) 한류 전개’, ‘1인 창조기업의 대두’, 그리고 ‘녹색성장 및 방통융합에 따른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점 추진 시책을 전개해나간다.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고품질 일자리 창출과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해나간다. 공공자금의 투자조합 출자 및 제작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운영으로 단속을 강화하며, 저작물 유통활성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를 개선한다. 콘텐츠 수출증대를 도모하며 국산 게임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

한류의 지속 및 문화향유욕구를 반영하여 대중문화예술의 체계적 진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4) 민족문화의 진흥

먼저 우리정신, 우리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문화원형을 개발하고, 한글사랑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며 한글의 산업화기반구축을 위한 한글활용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한국어 보급을 위하여 외국 현지 대학의 자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육 차원에서 ‘한국어 전공 학과’ 또는 한국어 교양 강좌‘를 60개국의 661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주요 국가별 전 세계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국어 문화보급정책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의 한국어 보급정책을 일원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확장해나가고자 대통령소속 국가경쟁력위원회와 함께 일관된 한글세계화 정책인 “세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립 대한민국의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건국과 국가발전의 과정을 담은 근현대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도 대부분 건국과 혁명을 계기로 수도중심부에 건립하여 민족자존과 긍지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¹⁴⁾

정부 출범 1년이 경과하면서 국민의 국가의식 제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

민 정신문화진흥과 호국과 독립의 역사를 지키고 계승하며 국민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수준 높은 문화를 통한 내외국인이 대한민국 국가관과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훈처 등이 긴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이다. 국민정신문화 창달을 위한 비전은 우리문화정체성의 창조적인 추구를 내세우고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 발굴활용, 일상과 전통문화 공간의 접목, 한국학진흥의 지원, 가치 지향의 문화 확산, 전국 이야기 대회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5) 지역문화(문화도시)

이명박 정부는 지역문화역량 강화와 지역거점 문화도시 설계에 대한 지난 정부의 사업을 계승하면서도 친환경적 공간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대도시형 생태문화도시의 모델로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친환경 레저도시로서의 태안, 부산 송정역, 포천 채석장 등 지역근대산업유산을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재생계획 수립, 무등산계곡에 젠 빌리지, 친환경 에너지 체험마을 슬로우 시티 등 ‘탄소zero’의 관광문화 대표 도시 및 마을 조성 지원사업,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환경친화적 지역 활성화의 거점화를 통한 지역관광·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광주(아시아문화), 경주(역사), 전주(전통) 공주·부여(역사)등 지역특화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의 확충과 운영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국민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 도시공간 전반에 걸쳐 문화적 이미지가 창출되고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권역별 문화도시,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예술과 콘텐츠가 결합된 환경친화적 문화도시조성을 위하여 2008년 광주, 부산, 경주, 전주 등 6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2009년에는 7개소, 2010년에는 8개소, 2011년에는 9개소, 2012년에는 1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문화

14) 건국과 혁명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주요국의 역사박물관은 다음과 같다. 미국사 박물관, 중국혁명박물관, 러시아 현대사박물관, 독일역사박물관, 아르헨티나 독립혁명기념역사박물관 등이 그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자료, 2009).

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권에 위치한 전통시장거리를 2012년까지 10개소 조성하고, 돈화문로의 국악거리조성사업 등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관광객 증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디자인의 문화가치를 확산하고 산업화지원을 위한 ‘디자인문화 중장기 육성계획’을 2009년 수립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 및 공간 문화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일상의 공간을 문화적으로 디자인하는 디자인 솔루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 건강 등 사회적 주제에 대한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를 2009년도부터 추진하여 2010년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기업과 함께하는 건물전면 공간조성’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사업이 추진계획 중에 있다.

(6) 문화복지

경제위기로 인한 문화여가비 감소로 문화예술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저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행복과 사회전체의 활력을 증진하여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제공 프로그램인 ‘국민공감’ 문화예술프로젝트,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복지제도 도입 추진사업,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 할인제도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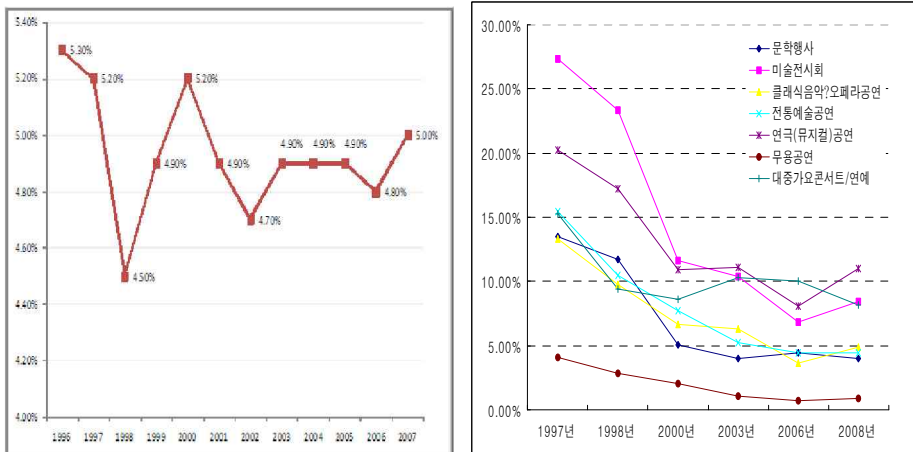
장애인의 문화, 예술인재 육성 및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물이 없는 시설만들기 등 장애없는 문화세상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물이 없는 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해 극장, 공연장, 전시관, 문화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람석을 확보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2012년까지 48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을 통한 재활지원 및 삶의 행복찾기 사업을 통해 점자도서, 녹음도서, 수화영상 등을 제작보급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바우처 연간 예산액의 40%를 장애인에게 우선배분하기 위하여 2008년 27억원의 예산을 공연, 전시관람 바우처에 할당하였고, 2009년에는 40억원의 예산을 도서 및 문화예술도구보급에 사용할 계획이다. 2012

년까지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2012년에는 70억원의 예산을 장애인을 위한 문화바우처에 할당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행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여가진흥법』을 제정추진하며 노인 1인 1여가 플러스 제도, 생애주기별 여가문화활동 콘텐츠 개발, 지방문화원을 통해 어르신 대상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버 문화프로그램을 중점 개발·운영한다. 폐교, 폐동사무소 등 농·산·어촌 및 소외지역에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의 주민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교정시설, 소년원에 문화예술교육을 170개반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과 소통의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며 한국어·문화이해의 연계교육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생활에 속히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공공도서관 ‘다문화 코너’ 개설 등 이주민 문화·여가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강사를 양성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다문화 가족의 한국문화적응과 다문화이해를 돕도록 한다. 문화자원봉사센터를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운영시스템 구축방안연구를 2009년 완성하여 2010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1〉 문화여가비 추이 & 문화예술관람률 추이



문화여가비 추이

문화예술관람률 추이(1)

국민 문화복지의 지표가 되는 문화여가비와 문화예술관람율의 지난 10여년의 추이를 보면 위의 표와 같다. 문화여가비의 경우 지난 정부기간동안 저수준 평균치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1997-1998년간의 IMF 경제위기 이후 하락된 문화여가생활을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이러한 경향이 2007년부터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관람율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10년 전에 비하여 하향 평준화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문화여가의 열악한 현상을 회복하고 증대하는 일은 창조적 삶과 사회전반의 창조사회 진입을 견인하는 저변을 확산하고 국민의 창조역량을 제고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엘리트 예술인과 창조그룹을 통한 창조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 다중의 창조적 분위기 확산은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양립되는 과제이다. 이제는 이와 같은 범국민적인 창조그룹의 확산을 통한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여가문화 확산의 당위성이 확인되는 것이다.

(7) 세계화

이명박 정부는 문화를 통해 동서문화교류의 허브전략을 수립했다. 2009년 5월 30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아시아정상회담을 계기로 아시아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류를 독립변수 형태로 다루는 국가정책 영역으로 부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서문화교류 허브전략의 일환이다. 이명박정부는 아시아권역별 문화협력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6년에는 세계문화포럼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세계를 향한 문화 발신기지 구축전략도 수립하였다. 한국문화 세계화를 전략거점으로서 문화관, 홍보관 개편과 연계한 권역별 해외문화원을 확충하고 문화예술의 해외진출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2) 새로운 문화정책의 형성

새정부 문화정책은 「문화비전 2012」에 나타나 있다. 창조적 실용주의를 통한 선진일류국가로 비전으로 삼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게 문화정책목표도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설정하였다. 주요 4대 목표로 ①

“문화가 펼쳐지는 나라”, ② “콘텐츠로 부유한 나라”, ③ “이야기가 있는 관광의 나라”, ④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이고 6대 추진방향은 ①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 ②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③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④ “상생하는 콘텐츠와 산업”, ⑤ “녹색으로 바뀌는 문화관광”, ⑥ “문화와 체육의 모세혈관”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중점 방향에 따라 새 정부는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대외적으로는 문화를 통해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가며 개방되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이 됨을 지향하고 있다.

3)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문화정책의 비교분석

“우리 문화의 저력이 21세기의 열린 공간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다짐을 취임사에서 밝혔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환율 불안, 고유가, 물가상승 등 외부적인 경제위기의 상황 속에서 경제우선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화정책은 일견 산업으로서의 문화를 강조하는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정책의 주체의 변동에 수반한 정책의 변동을 나타내었다고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 있어 평등배분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확실히 지원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취하는 데에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무엇보다 예술정책 추진에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술의 질적 탁월성 추구에 강조를 두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분배적 통치철학의 바탕에서 문화정책의 기조도 수직보다 수평적 문화, 권위주의의 타파 등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문화정책의 수혜자들이 소외계층, 시민단체, 여성문제, 청소년교육문제 등을 아우르는 다원적인 문화정책으로 수립되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가치의 재인식이라는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6.25, 현충일, 건국 60주년, 안중근의사 의거100주년 등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민의 국가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정신문화로서의 우리말 가꾸기와 한글 세계화 등의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소외계층과 문화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는 여전히 더 중시하여 다양한 정책을 집행

하여나갔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간 문화정책의 차별성은 문화관광부의 조직적 측면에서 먼저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문화관광부에 국정홍보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하여 외양상으로 규모와 기능을 증대시켰다. 노무현 정부의 문화사업은 5대기본과제하에 27대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과제와 단위사업을 담은 문화정책 로드맵 『창의한국』을 수립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4대 목표(기본과제) 하에 32대 핵심정책과제를 담은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문화비전 2008-2012)』를 수립했다.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의 차이점을 짚어보면, 우선 노무현정부의 경우 양성평등문화육성, 열린민족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책성 및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그리고 남북문화교류확대 등의 다양한 계층과 순수미술진흥정책의 세부적인 항목들이 다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서는 상기의 항목은 축소되거나 삭제되고, 대신 대중문화예술의 진흥, 환경친화적 문화정책, 문화일자리만들기, 그리고 콘텐츠산업의 정책 사업이 등장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그 외에도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CT기술개발 등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 등 문화산업적 측면과, 문화복지와 녹색성장과 연관되는 문화도시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었다.

〈표 2〉 이명박 정부의 주요 문화정책 내용과 핵심정책 변동

(4) 범주	(5) 구분	(6) 주요 정책 내용	(7) 핵심정책변동 및 조정내역
문화예술진흥	창의적인 문화예술 진흥	- 유,초등 문화예술교육 집중활성화 - 차세대 청년예술인재육성 - 예술창작공간확충 - 안정된예술지원제도 구축	강화 확대 확대 지원방식 변경
지역문화	개성있는 문화공간조성	- 생태문화도시개발(슬로우시티, 생태예술마을) - 녹색문화운동전개 - 근대산업유산 창조적 활용 - 권역별 문화도시, 문화거리조성 -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사업확대	신설 신설 지속 발전 지속 지속 발전
문화기반조성	문화일자리만들기	- 콘텐츠산업창업지원 및 대학인턴제 활성화 - 문화예술기관단체설치 운영활성화 - 관광산업투자활성화(조세부담 및 규제개선) - 체육보조강사 배치	신설 신설 강화 강화
문화산업육성	문화콘텐츠 유통활성화 및 역량강화	- 창의적 전문인력양성 - 글로벌시장진출확대 - 핵심콘텐츠 집중육성 - CT기술개발 및 저변확대 - 콘텐츠유통질서개선 - 저작권교육홍보강화	지속 강화 지속 강화 강화 강화 신설 강화 강화
민족문화창달		※ 타 문화정책에 포함추진	
문화복지	문화복지	- 장애물없는 문화시설만들기 - 문화예술을 통한 재활지원사업 -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 노인문화예술교육 - 다문화이해증진 프로그램 확대	지속 발전 신설 지속 발전 지속 강화 확대 강화
세계화	문화교류거점 형성 및 세계화	- 동서문화교류허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제네트워크 구축 - 아세안 문화교류를 중점 추진	강화 지속 발전 신규

3. 집권 중반기 문화정책 방향모색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부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전국의 문화소외 지역과 계층에 대한 전국적인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집중 투입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1,350여억원을 투입하는 157개 사업으로 1,600만 여명에

문화향유혜택을 주고 실질적인 문화적인 누림으로 삶의 희망을 북돋우며 일 자리를 만들어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교육·문화·복지 등 총체적 생활공간으로서 기초생활권에 기반한 문화향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전 국민이 생활권 단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손쉽게 향유하고, 더 나아가 재생산해 낼 수 있도록 공간 및 인력, 프로그램 등을 재정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시설은 종전의 신규건립위주에서 유희공간을 지역여건과 주민의 수요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문화공간으로 재정비 리모델링하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기존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적 기업과 연계하여 문화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며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문화매개인력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것은 창조적인 활동을 지역의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문화예술이 단순히 소비적인 행동이 아니라 생산적 창조적 동기를 유발하고 문화종사를 통하여 지역의 삶의 활기를 높여나가며 창조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가도록 이끈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건립, 한글문화관의 조성, 박물관 복합단지의 조성 등 국가적인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적 창조성 계발의 기반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반문화시설은 이에 수반한 전문인력과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의 공급을 수반하는데 이를 통하여 고급 일자리의 창출은 물론 창조적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와 과정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막대한 부가가치와 경제적 활력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문화적인 활동과 창조적인 과정과 사고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시대적인 변화와 우리나라의 창조사회진입에 부응한 차질 없이 대비해나가고자 하는 정책의지이기도 하다.

IV. 결 론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한국사회에 있어서 정치이념의 진보로부터 보수로의 회귀를 의미하였다. 문화정책의 영역에도 많은 변동을 야기했다. 문화권

력의 이동현상도 있었다. 정부의 변동과정에 따른 지도자들의 도덕적 법률적인 책무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을 요구받는 현상이 문화 영역에서도 일부 제기되었다.

한국문화정책의 역사에 있어서 문화예술정책의 지원체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전격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이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성립이 그 상징적인 부분이었다.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이와 같은 위원회 제도의 운영은 급격한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점진적인 인적 구성과 운영체제에 있어서 주체들의 변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갔다. 지원방식의 변동은 또 다른 정책의 변동에 속한다. 시대적인 변화가 지원체제의 변동을 가져온 면이 있으며 이것은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중요한 변동의 계기가 되었다. 정부의 변동과 시대적인 요구와 문화환경의 개선 및 창조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정책 판단이 이와 같은 정책 변동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역사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던 제도의 변동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상기의 결과를 정권교체라는 단일의 변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정부시기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예술지원제도가 위원회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정책기조의 변화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정책역량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의지, 기술발전으로 인한 정보민주주의의 증진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예술지원제도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합리적 기준의 미비, 일부위원들의 심의에 있어서 주관적 판단의 작용, 지원에서 배제되는 단체의 발생 등으로 또 다른 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창작의 욕을 고취한 창작여건의 개선, 경쟁력 있는 예술인 발굴 육성 등 근본적이고 변화하는 문화예술 창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예술진흥시책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문화산업 담론은 정부정책의 이념기조와는 별개로 국내외 영향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간주되어 과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 순수문화예술 진흥분야에서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인프라 구축 등 간접 지원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데 비하여 문화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은 자유시장 경쟁에 의한 발전논리보다는 정부의 직접

정책논리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의 강화가 이와 같은 문화콘텐츠의 발전과 안정적인 유통구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국가브랜드위원회. (2009).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대통령 보고대회 자료.
- 김연수. (2006). 「한국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 분석」.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 김윤수. (2006). 「한국 건강보험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문화관광부. (2008). 「참여정부 문화관광정책백서-문화예술편」.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2009). 「2010 문화재정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2008). 「생활공감 공연예술 정책」.
- _____. (2008a). 「문화비전 2012: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
- _____. (2008b). 「이명박정부 국정철학 및 비전」.
- _____. (2008c).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 _____. (2009).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2009.2.19」. 제281회 국회 보고자료.
- _____. (2009). 「2008 문화정책 백서」.
- 박광무. (2009). 「한국문화정책의 변동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신동아 2008.11: 213-217.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 기사.
- 이명석. (2006). 거버넌스이론의 모색: 민주행정이론의 재조명. 「국정관리연구」, 1(1): 36-63.
- 지식경제부 IT 통계포털: <http://www.itstat.go.kr/>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8). 「2008 문화향수 실태조사」.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9). 「2008년 문화산업동향 및 2009년 문화산업 10대 전망」. KOCCA Issue Paper 2009.1.19.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http://www.nia.or.kr/>.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http://mopas.korea.kr/gonews/main.do>
- Bogason, Peter. and Mette Zølner. (2007). *Methods in Democratic Network Governance*. NY: Palgrave Macmillan.
- Hall, Peter A. and Rosemary C. R. Taylor. (1996).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 *Political Studies*, 44: 936-957.
- Hall, P. and R. Taylor. (1998). The Potential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 Response to Hay

and Wincott. *Political Studies*, 46(5): 958-962.

Kingdon, John. W. (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Harper Collins.

박광무(朴光武):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행정학 석사, 1989)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200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단 정책관리실장,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을 거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연구로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최고간부회의의 역할에 관한연구”(1989), “문화도시조성 관련 갈등해소과정의 네트워크 작동사례연구”(2008) 등이 있다(kmoopeter@naver.com).